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년 7월

대한민국정부

순 서

Ⅰ.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 1

1. 국정목표의 선정 ····· 3

2. 분야별 국정목표 ····· 5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5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7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8

국정목표 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9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10

Ⅱ. 국민께 드리는 약속(120대 국정과제) ····· 11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19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27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33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41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51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59

순 서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67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73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79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89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99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109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119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125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135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143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149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155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161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171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181

22.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187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193

I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1 국정목표 선정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 **❺미래** + **❻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설정

○ 윤석열정부의 **미래지향성**(과학기술, 창의교육, 청년 등) 및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

◇ '**국민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 마련

정치 행정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래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 안보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 시대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 정 비 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⑪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⑭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⑲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⑳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㉑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㉒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㉓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분야별 국정목표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

○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 정 과 제 (15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

○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

○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 정 과 제 (26개)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

○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국가**

○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 정 과 제 (32개)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나가면서,

○ 기후환경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 정 과 제 (19개)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 과학기술 강군으로 만드는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런 조국**을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과제 (18개)	▪ 북한 비핵화 추진 ▪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

○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과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 속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 정 과 제 (10개)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Ⅱ

국민께 드리는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목표	약속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9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1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22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23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24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25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26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27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29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30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31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32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33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35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36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37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38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39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41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43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44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45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46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47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48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49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51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53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54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55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56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57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58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9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61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62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63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64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65
	[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67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69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70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71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72
	[약속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73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75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76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77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78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79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81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82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83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84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85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86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87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9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91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92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93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94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95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96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97
	[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99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101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102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103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104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105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106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문체부)	107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09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111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112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113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114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115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116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117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19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121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122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123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124

목표	약속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25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127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128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129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130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131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132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133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35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137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138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139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140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141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43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145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146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147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148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49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151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152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153

목표	약속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55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157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158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159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161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163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164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165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66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67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68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169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71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73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74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75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76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77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78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179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180

목표	약속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81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83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84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85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186
	[약속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87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189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90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191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3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95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96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19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 과제목표

○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 과제목표

○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 회복 및 국민 생명 보호**

○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 추진

-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

○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신종변이 감시 강화

○ (**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 강화***

*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

○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행 예측·위험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 체계 선진화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최소화**

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 과제목표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 주요내용

○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즉시 가동**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

○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 기대효과

○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30년 NDC 달성에 기여**

○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 달성**

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 과제목표

○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

○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하여 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

□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

○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검·경 협력도 강화

○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

□ 기대효과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 확립**

○ **국가 법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

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 과제목표

○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주요내용

○ (**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

-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설계

○ (**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재정정보 공개 확대 추진
-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칭)**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 기대효과

○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

○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 도모

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방통위)

□ 과제목표

○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 주요내용

○ (**공영방송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지표 개발**(KBS 중심) **및 재허가 반영**,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

○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 추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및 **환류체계** 마련

- 공적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 개발** 및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기대효과

○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여 미디어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 과제목표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 정비사업 규제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 주요내용

○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 기대효과

○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 과제목표

○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주거안정 세제지원 강화**)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개편,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기대효과

○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 과제목표

○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 기대효과

○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과제목표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 기대효과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 과제목표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 주요내용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기대효과

○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 과제목표

○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

□ 주요내용

○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 확대**

○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사회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제 마련

- **장기 지속 갈등 현안** 집중 관리·해결 및 새롭게 표출되는 **미래 예상 갈등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 예방·최소화

□ 기대효과

○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중심 국정운영 실현

○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국민참여로 참여민주주의 달성에 기여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 과제목표

○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 주요내용

○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 중앙·지방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 (**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

○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 기대효과

○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 및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 '만 나이' 통일로 법적 분쟁 및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생활의 혼란을 예방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 과제목표

○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 주요내용

○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 (**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 강화

-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

○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 개선

○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 기대효과

○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범정부적 활용(중앙부처 본부, 소속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연계 의료기관 40여개 → 150여개) 등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 과제목표

○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기능·인력 효율화 등 혁신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혁신 유도**

- 기능점검을 통해 **민간경합**, **유사·중복**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 **과다**한 **조직·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 **복리후생**, **호화청사**, **불요불급**한 **자산**(사옥, 사무실, 부대시설 등)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

○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자율**을 **확대**하고, **총괄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

-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기관별 특성** 반영, **소규모**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직무**와 **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 과제목표

○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

□ 주요내용

○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규제혁신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 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는 **'규제심판제도' 신설**

○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

○ (**규제비용 감축**)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기업·국민 부담 완화**

□ 기대효과

○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동력 확충**

○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 과제목표

○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

□ 주요내용

○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의 개편**,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추진
-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 ESG 관련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 지원***

*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 강화**

*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

○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및 운영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
-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혁신 메커니즘 적극 지원

*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셰르파 구성,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경쟁력 영향 반영

○ (**클러스터**)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 기업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추진
- **클러스터·메가시티**별로 신산업 선정·육성, **강소도시**에 상생형일자리 확대
-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

*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산단 리모델링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

□ 기대효과

○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 과제목표

○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 주요내용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 기대효과

○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 촉진**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

○ 시장중심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 과제목표

○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잠재력 제고

○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

□ 주요내용

○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

○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 추진

□ 기대효과

○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활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물가부담 경감 등 민생 어려움 해소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 과제목표

○ 산업-통상 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IPEF·CPTPP·RCEP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태 통상 중추국 도약

□ 주요내용

○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

-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 확대**
-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구축

○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가칭)**디지털 통상 로드맵**('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 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 확대**

○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 대응

-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협상 진전

○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통상질서 주도

○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물류지원 강화

-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 기대효과

○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新통상 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5대 강국 도약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 과제목표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 주요내용

○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 확립**

○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 과제목표

○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거버넌스 개편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 주요내용

○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및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 추진

○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 촉진 목적 民官 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

- 기술지주회사·기술신탁관리기관·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산업 R&D 투자전략 회의」신설

○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 가속화

○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 기대효과

○ 30%대에서 정체중인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40% 달성**

* 공공연 기술이전율(대학, 연구소 등, %) : 37.9('17), 34.3('18), 35.9('19), 35.5('20)

○ 민간 중심의 R&D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 과제목표

○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 주요내용

○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 기대효과

○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車 8%, 船 70%)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 과제목표

○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 주요내용

○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 구축**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평가·인증 등 바이오플라스틱 육성방안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 기대효과

○ **'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1년 1,280억불 → '27년 1,700억불)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 과제목표

○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 주요내용

○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한국형 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및 **임상연구** 등 지원 강화, 공적 임상연구 확대

○ (**디지털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 기대효과

○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1년, 257억 달러 → '30년 600억 달러), **일자리 확충**('21년, 98만개 → '30년 150만개)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 과제목표

○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해소를 넘어서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 마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 주요내용

○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검토 및 입법 추진**

○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

-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차별 해소** 등 **세제·금융·재정 분야 차별 해소 및 특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혁신**, **서비스 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 기대효과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 노동생산성('19년 6.3만불)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주요내용

○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 (**미디어 산업 규제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개선**

○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생태계 혁신**

○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예비인력·재직자)
-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육성**

○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 마련

□ 기대효과

○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 19.5조원('20년) → 30조원('27년) 확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과제목표

○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 주요내용

○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 확대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위상 제고

□ 기대효과

○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5년) 추진

○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 과제목표

○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

○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 확립

□ 주요내용

○ (**규제혁신**)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혁신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

-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사모펀드)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 면제**
-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절차 도입**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

○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 완화 및 시장자율감시 기능 제고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 **지주회사 CVC(기업형 밴처캐피탈)**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 집중 감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 (**전속고발제도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 개정)

□ 기대효과

○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활력 있는 시장경제 조성**

○ 시장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 과제목표

○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 주요내용

○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 (**납품단가 제값 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 기대효과

○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

○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 기반 마련

○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과제목표

○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 주요내용

○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 기대효과

○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21년, 23%)

* 스마트공장 수준 3단계(기초/고도화1/고도화2) 중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

○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년, 1.5%)까지 확대 추진

○ 수출 1천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사로 확대('21년, 2,262개사), 비수도권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비율을 45%까지 확대('21년, 41%)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 과제목표

○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창업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 달성 ('21년, 24만개/년 → '27년, 30만개/년)

○ '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과제목표

○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

□ 주요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5년간, 300개)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 유용행위 제재 강화

○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 기대효과

○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정상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

○ 민간 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수를 '27년까지 누적 2.3만개사 달성 ('21년, 1.1만개사)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 과제목표

○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 마련

-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 과제목표

○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 기대효과

○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 과제목표

○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주요내용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 기대효과

○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과제목표

○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대효과

○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도모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 과제목표

○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 주요내용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 **국토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및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을 통해 미래 여건 변화 및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 기대효과

○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

○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 과제목표

○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 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철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권역별 거점공항**(가덕도,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 교통편의 제고

-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추진

○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이용 편의 제고**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 과제목표

○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 주요내용

○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 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 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제주 신항만**은 **관광허브**로 육성

- 수리조선, 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 **제주 신항만**은 여객 전용으로 개발,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

○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 지원

□ 기대효과

○ 국적 선복량 8,900만톤('21년)→1억톤('27년), 공동물류센터 3개('21년)→8개('27년) 확대

○ '26년까지 선박 총 296척(민간선박 85척, 관공선 211척) 친환경 전환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 과제목표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

□ 주요내용

○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 기대효과

○ 첨단감시체계로 해양 감시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기준 16%)

○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104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18년 6.7만톤→'27년 3.4만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 과제목표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 주요내용

○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

□ 기대효과

○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 완화**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 완화**

○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추진**

○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 기대효과

○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평균 빈곤갭* 감소)

*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

○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 완화**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 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 주요내용

○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 주요내용

○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 지원**

○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

○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

-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

□ 기대효과

○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 과제목표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주요내용

○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 과제목표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 주요내용

○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 기대효과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80점 이상 목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 과제목표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 기대효과

○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 과제목표

○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주요내용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 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기대효과

○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잠재력 제고**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 과제목표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 주요내용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 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

- **장기 노사분쟁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 기대효과

○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 과제목표

○ **구직자·기업**에 **수요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 주요내용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

□ 기대효과

○ 구직자·기업 등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전달체계간 연계·협업으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 과제목표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

○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 기대효과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고용안정** 및 **원활한 직무전환 지원**

○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 과제목표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 확산**

○ (**일터학습 인프라**)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 업종 다양화,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 지원**

-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한 **HRD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강화(훈련비 지원 확대 등)

□ 기대효과

○ **전 국민 누구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 과제목표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 제고**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

○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 완화**

○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종사자** 등 **대상 훈련 기반 조성**

○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 제고**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 과제목표

○ 취약계층 등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 주요내용

○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검토(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및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

○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중장년층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가치** 확산,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 종교차별 예방활동 강화

○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우리 고유의 문화** 보존 및 확산

- **전통문화 가치 재조명** 및 **일상 속 확산**,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연구개발** 등 다각적 지원,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홍보·국제교류** 등 지원
- **세종학당 확대·내실화** 및 **교육 현지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

○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
-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

□ 기대효과

○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격차(문화예술관람률 소득별 격차 '20년 50.6%p, 지역별 격차 17%p)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 과제목표

○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

○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 기대효과

○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예술활동기회 보장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 과제목표

○ 한류 영향력 지속·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대표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 (**K-콘텐츠 매력 확산**)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으로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 기대효과

○ **K-콘텐츠 매출액** 128조원('20년)→**200조원**('27년), **K-콘텐츠 수출액** 119조원('20년)→**230조원**('27년), **한류팬** 수 1.2억명('20년)→**3.6억명**('27년) **달성**

○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제고**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 과제목표

○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 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 과제목표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 주요내용

○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 기대효과

○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21년, 60.8% → '27년, 69%)

○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 ('21년, 51.5조원 → '27년, 100조원)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 과제목표

○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 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 개발**

-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 추진

○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 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대효과

○ **관광산업 규모** ('19년) 108조원 → ('27년) **180조원, 외국인관광객 수** ('19년) 1,750만명 → ('27년) **3천만명** 달성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문체부)

□ 과제목표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 **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육성,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미래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기반 강화

○ (**청와대 개방 및 역사 보존·활용**)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활용**

- 청와대 전면 개방, 문화재 기초조사 및 정비 등

○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로 **규제 일원화** ('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및 미래형 전승체계 구축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 확대

□ 기대효과

○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

* 세계유산 등재 확대('22년 52건→'27년 65건), 우리 유산 가치 전 세계 확산으로 한류 기여

○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으로 연결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 과제목표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 간 협업으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 과제목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 주요내용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기대효과

○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보호·지원,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 과제목표

○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

○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119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 기대효과

○ 신속·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 화재 안전도(10만명당 화재 사망자 수 '21년, 0.6명 → '26년, 0.56명), 심정지환자 인명소생률('21년, 9.8% → '26년, 11.8%) 향상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 과제목표

○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 기대효과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 축소**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전·월세 보증금 등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비

□ 주요내용

○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기대효과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 대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 과제목표

○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

○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

□ 주요내용

○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生産**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輸入**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流通**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技術素材**식품·용기 안전검증 확대**

○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 구축

-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 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중독, 손상 등) **예방**정책 수립

○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

□ 기대효과

○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신속한 피해조사 및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 50% 단축**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과제목표

○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주요내용

○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 (**건설·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

○ (**안전한 국토 조성**)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

-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시행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관련 재해를 감축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 **산림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 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 기대효과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 향상('21: 5.7점[도시 6.5 수준] → '27: 6.7)

○ **귀산촌** 확대('20: 5.9만명 → '27: 8) 및 **목재자급율** 제고('21: 15.9% → '27: 25)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 과제목표

○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 (**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년)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23~)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 (**농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 (**환경친화적 농업**)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7),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 → '27: 23)

○ (**방역체계 고도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 기대효과

○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촉진** 및 **벤처창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27) 등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

○ 축산 분뇨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 과제목표

○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

□ 주요내용

○ (**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 (**농가 경영안정**) **재해보험 품목 확대**('22: 67개 → '27: 80개)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

○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관측**을 **고도화**(실측조사 활용 등)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입물량, '21: 16% → '27: 35%)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 강화

○ (**먹거리 지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 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 **축산물 PLS 도입**('24년,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 기대효과

○ **밀, 콩 자급률 제고**('20: 0.8% / 30.4% → '27: 7.0% / 37.9%) 및 해외 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

○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및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경영안정**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 과제목표

○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 주요내용

○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 추진**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년)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 기대효과

○ 어가 평균소득 53백만원('20년) → 65백만원('27년)으로 상향

○ 수산업 매출액 69.8조원('20년) → 80조원('27년)으로 제고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 주요내용

○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등을 통한 민간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

○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R&D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활용 지원체계** 마련

○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 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

○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 기대효과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주요내용

○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 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 (**특별법 제정**) 전략기술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R&D 우선 투자,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등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암호 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 기대효과

○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기반 조성

○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 (**전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 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 부여**

□ 기대효과

○ 기초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HCR 등) 2배 확대

○ 전략기술 분야 G5 수준의 핵심연구인력 확보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 주요내용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全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년)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년)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 기대효과

○ '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1년 6위),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 ('21년 23조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1년 12위),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20년 최고국 대비 88.6%→ '27년 93% 이상)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년)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23~),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 추진

□ 기대효과

○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48건, ~'26)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1년 12.6조원→ '27년 20조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제고**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 주요내용

○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경남 사천)

○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추진

*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 달 궤도선 발사,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 기대효과

○ '**누리호**' 발사('22.6월) 성공과 '**달 궤도선**' 발사('22.8월), **적극적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 확대**

○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 현재 동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 창출→경제성장→**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완성

□ 주요내용

○ (**원천혁신역량 확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 제고

-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

-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 지원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촉진

○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 수립·이행

-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 제고

□ 기대효과

○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 실현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 과제목표

○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 주요내용

○ (**디지털 인재양성**)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인재양성**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전향적 규제개선** 및 교원·교육과정·기자재 등 **지원**

-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 내 부트캠프** 설치
- **전공·비전공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과 첨단분야 **재교육·직업훈련** 확대

○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개선

○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

- SW・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 저소득층 SW・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문해교육 강화 등

○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 부여**

-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

○ (**민관협력**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청년 구직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활용

□ 기대효과

○ '27년까지 디지털·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

○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 과제목표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월)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지원**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

○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지원**

-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 확대

○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 기대효과

○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대학규제 혁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체계 마련

○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 체계를 확산**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 → 고도화 → 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기대효과

○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

○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 과제목표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 주요내용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 ('22년)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27)

-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 기대효과

○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 경감**

○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과제목표

○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

□ 주요내용

○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확산**

○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6년, 17개)

○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년)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추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 마련

□ 기대효과

○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 강화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 과제목표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년 예산)

○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

○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 (**공간·이동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산 등 탄소중립 공간 조성

-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철도·항공의 저탄소화** 등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 기대효과

○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강화

○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22~)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2~),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 **곰 사육 종식**(~'25), 야생동물 질병관리 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 강화

○ (**기후위기 감시·예측**) AI, 빅데이터 등 기반 **기후변화 및 위험기상 예측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체감형·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기대효과

○ **제방정비율 향상**(국가하천 80% → 90%) 등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 과제목표

○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 주요내용

○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23~)

○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2년)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

□ 기대효과

○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21년 18㎍/㎥→'27년 13㎍/㎥)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과제목표

○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

□ 주요내용

○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 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m³/년 생산)

□ 기대효과

○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 '20년 160만톤 → '25년 **20% 감량**

○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년 0.9% → '26년 10%)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 기대효과

○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형성** 기대
○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

○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 과제목표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 주요내용

○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

○ (**법제 개선**)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 기대효과

○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 제고**

○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 과제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 주요내용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 과제목표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 주요내용

○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추진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DMZ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통일 담론** 확대 및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추진

○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북한의 변화 견인**과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다방면의 남북 상호 접촉·왕래**로 민족 동질성 회복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21년 70.4%) 개선 등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 주요내용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 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 강화

-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
-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

□ 기대효과

○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개선**

○ **분단**으로 인한 **고통 경감**

○ **북한이탈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 도모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 과제목표

○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

□ 주요내용

○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진화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 추진

○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 기대효과

○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 과제목표

○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확대

□ 주요내용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 (**중동**)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 (**중남미**)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對중미 협력 확대
- (**아프리카**)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기대효과

○ 우리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 과제목표

○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下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

○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 등 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 반영

○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 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 기대효과

○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 과제목표

○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

□ 주요내용

○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 下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 동참

○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 강화**

□ 기대효과

○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 확립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 과제목표

○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 과제목표

○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

○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 주요내용

○ (**체계 정비**)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學·硏·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新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 인력 확보

□ 기대효과

○ 汎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 과제목표

○ 개최지 선정까지('23.11월)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

○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

* 부산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 주요내용

○ (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 추진**
-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 노력

○ (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구성하고, **Korea One Team 유치활동 전개**

○ (기반조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

□ 기대효과

○ **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 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잠정)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 과제목표

○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

□ 주요내용

○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

* 국방부장관의 전력증강, 연구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

○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우리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부대·전력·병력 구조 재설계

○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

○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국방 R&D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체계**를 구축

□ 기대효과

○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여,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인명손실 최소화**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 과제목표

○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

□ 주요내용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Kill Chain	• 북 핵 · 미사일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 확보 • 북 핵 · 미사일 위협의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방안 발전 및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확충**

○ (**전략사령부 창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

○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보강**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 확보**

□ 기대효과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 과제목표

○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 주요내용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연습 강화**

○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하여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추진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보장

□ 기대효과

○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 구축**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대전)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육성,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수입선 다변화, 비축확대) 수립 및 국산화 병행
도전적 R&D 환경 조성	•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 **수출형 방산물자 부품·성능개량 지원**, **선제적 부품 국산화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 기대효과

○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무기체계 가격인하, 운영유지비용 절감**과 기술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로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향상**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 과제목표

○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구축**

○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추진 (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성 향상 피복류, 전투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장구류 전력화 추진 등)

○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센터 단계적 확대운영

○ (**병영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 조성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 (**국민권익 보호**)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 도모

□ 기대효과

○ 기성 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 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 만족도 제고**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 과제목표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25년, 병장기준)

○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 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 검토/추진

○ (**처우 및 여건 개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 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 강화**

○ (**인권보장 강화**)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 강화**

□ 기대효과

○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 마련을 통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공정보훈 실현**)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및 **보상격차** 개선

-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심사·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

○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안장서비스 확대

- **지역별 보훈대상자 수요를 감안하여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

○ 제대군인에게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 인력 확보에 기여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 과제목표

○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

○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22년)

  *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 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

○ (**독립운동 계승**)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기대효과

○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 도모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 소통 · 협력 강화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 주요내용

○ (**국가-지방 기능조정**) 보충성 원칙에 따른 국가-시·도-시·군·구 **사무배분기준 보완** 및 사무총조사,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양 기반 마련

-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부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 법률상향**

○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 실시

○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강화 방안 마련 추진

○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 대상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 마련

□ 기대효과

○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 과제목표

○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 추진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균형장치 강화**

-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 확대***

*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공개·환류 등 책임성 강화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

-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 제도 정비

□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제고**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 과제목표

○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의 지역 인재양성체계 구축

□ 주요내용

○ (**학교 교육 다양화**)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교육자유특구 내에는 **다양한 대안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지원 강화**

○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

○ (**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상향 등 개선, 지역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 확대 방안* 검토

* 수도권·비수도권 기관 현황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등

□ 기대효과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마련**

○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기제 마련**

○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 주요내용

○ (**인적역량·경쟁력 제고**)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인사교류 확대** 지원,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 강화**

○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 (**이장·통장 처우 개선**)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 (**초광역지역연합 구축지원**)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 마련** 및 범부처 현장 기반 통합 지원*

* 범부처 전무가 워킹그룹을 지자체에 파견하여 중앙-지방 메가시티 발전전략 공동 수립

○ (**지자체 간 협력·조정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조합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현장방문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 운영**

□ 기대효과

○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로 **시너지 제고**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 과제목표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

○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시 신속 결정**
-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 원스톱 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미국, EU 등 해외 선진국과 동등한 투자유치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속 지원**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설계 추진**

□ 기대효과

○ 지방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 과제목표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

○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거점기능 강화**

□ 주요내용

○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

-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

-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 기대효과

○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 역할 강화

○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인구·산업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과제목표

○ 지역 주도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기업생태계+지식(기술)생태계+사회혁신생태계'를 조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창업·혁신거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 (**지역기업 생태계**)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과 **「연어형 지역인재」**에 **정착 지원**

○ (**지역 벤처투자**)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 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용

○ (**정책금융 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정책금융** 운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추진

□ 기대효과

○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집중된 지역산업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 주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의 자생력 강화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금의 자율배분,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 과제목표

○ 지역주도로 **초광역권「메가시티」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초대형 프로젝트 등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강소도시**」산업의 역량강화, 전환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거점도시의 일자리기능 강화

○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권역별 초광역산업발전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프로젝트 추진

- 지방대 부지, 군공항 종전부지 등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 (**강소도시 산업 활성화**) **민관이 협력**하여 **자력경제**를 견인하는 **투자 창출**(“(가칭)강소도시 투자유치 사업”), **지역주도 위기 예방** 및 **정부 지원**

○ (**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등

* 신성장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개편

○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 지역별 인력수요, 노동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연계 특화사업 신설 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확대·개편, **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내실화

□ 기대효과

○「메가시티」신산업 육성,「강소도시」경제활성화 등으로 **권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 과제목표

○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양성**하고 지역 단위의 로컬 브랜드 지원 시스템 구축

○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로컬 브랜딩**을 기반으로 **지역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로컬 창조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재생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 주요내용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대학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

○ (**로컬브랜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동네단위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로컬인프라**)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동네상권발전소**, 직(職)·주(住)·락(樂)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기획자·발전기금·민관협업 투융자** 등 제도 도입

○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 로컬 브랜딩 생활실험 등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단계적 확산**

○ (**맞춤형 종합지원**)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협약 활성화** 등을 통한 多지자체-多부처 간 협력 촉진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추진

□ 기대효과

○ **새로운 지역 주도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 과제목표

○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지원

○ (**균형발전지표 활용**)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지표 갱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통계청, 시·도 등), **지표체계 발전** 및 **중앙부처 등 활용확대** 지속 추진

○ (**지역공약 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부처 지정** 및 (가칭)**지역공약 이행체계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 점검**

* (구성)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지역전문가, 지역공약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역할) 부처별 지역공약 이행상황 총괄, 세부 이행계획 점검 및 개선안 협의·조정 등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

□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

○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이행 점검**(반기별, 매년), **지역순회 공청회**(연중) 개최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